

박상용 증인 선서거부 논란... 與 “위증 의도” 野 “법적 권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관련 청문회 핵심 증인 박상용 검사 퇴장 조치 민주 “사실 밝혀지면 국힘도 책임” 국힘 “인권·사법적 권리 존중해야”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운데 줄 왼쪽 첫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여의도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

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같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 “힘지 도전”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 강조 “국민의힘 제로로 만드는 것 목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은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 힘지 중 힘지”라고 했다.

또 조 대표는 “(귀책사유 정당) 무공천 원칙이 맞다”고 강조했다. 평택을은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재선거 지역이 됐다.

그는 “과거 전주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선을 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귀책사유가 있기에 무공천을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당대표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결정이 맞는 것이고, 그게 책임 정치의 원칙”이라고 비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재보선 전 지역 공천을 공인한 점을 두고는 “민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5자 구도가 되든 6자 구도가 되든 경쟁을 통해 이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나 선거연대 여부에 대해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평택을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평택을 주민은 매우 현명하다”며 “정당 사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권자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에 기초해 표를 제게 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김도읍, ‘무공천’ 제안... “3자구도 불리”

(부산북구갑)

국힘 지도부 “후보 낼 것”

부산이 지역구인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공천’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3자 구도가 형성돼 보수 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공천을 진행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에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의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덕동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전 대표를 설득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구성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일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이 없는데 단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화를 위해 저희들이 나서서 것은 맞지 않다.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지도부가 무공천에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공천하겠다고 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북갑에 후보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며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재수 의원이) 사퇴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안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후보를 내고 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당으로서 부산 북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부산·경남, ‘지방분권형 행정통합’해야”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국회에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

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중속

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중앙 집권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고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이 행정통합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울산은 당초에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부산과 경남이 먼저 출발했다. 울산시장이 부산·경남 먼저 하고 나면 울산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답했다. /김보민 인턴기자